‘AI데이터센터 구축’ 감사 문자에 李대통령 “이제 시작입니다”

김영록 지사, 정례조회서 관련 내용 소개

“전남 발전 새로운 출발점 더 많은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록 전남지사가 보낸 ‘AI데이터센터 전남 구축’ 감사 문자 메시지에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정례조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SK의 투자 결정은 전남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며 이 같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AI데이터센터 전남 구축 결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문자에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답장이 왔다”며 “전남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미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첨단기업들이 몰려드는 선벨트처럼 전남도가 대한민국의 선벨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AI데이터센터 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전남은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 이후 재생에너지 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RE100산단 조성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전력 단가가 낮으며 전력망과 부지, 용수, 도민들의 인심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남도는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장성, 광양, 해남, 순천에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특히 장성 데이터센터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다.

또한 2023년 해남 솔라시도에 1GW 규모 데이터센터파크 유치 계획을 수립, 전력 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한전과 협약을 맺고 154kV급 변전소를 2028년까지 조기 구축키로 했다. 올해 2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RE100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 등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에너지 미래도시 기획전략본부’도 신설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장보고시대 이후 세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황금 같은 찬스를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농수산 중심, 해상무역의 중심이었던 전남도가 이제는 미래·첨단 산업, 디지털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준 직원들의 노고가 큰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이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는 따뜻한 도청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박상형 한전KDN 대표이사와 탄소중립 및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대병원 ‘최종치료사업’ 예산 ‘반토막’

144억 승인 속 광주시 매칭 부족 68억만

이개호 “재정취약지 국비 탄력 지원 필요”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천30억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억3천400만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은 68억6천만원(47.6%)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 삭감된 수치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으로 2025년 국비 812억원+지방비 812억원(자부담 406억원) 구조로 설계돼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

경북·충북·제주 등의 경우 시·도가 편성 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 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광주·전남 등 예산 미달성 지역에 대해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시로부터 최소 60억원(연 150억원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20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진수 기자

전남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김재철 “전남 아동 1천391명 도내 초교서 확인안돼”

“아동 안전 사각지대 없어야”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도내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되는 아동이 1천391명”이라며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의 원인 파악과 아동 안전 확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3월 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7-12세 아동은 7만8천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만5천694명으로 1천391명의 아동이 전남 초등학생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1천400명에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최근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지난 2일까지 3주간 통학로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며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기실종아동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안전 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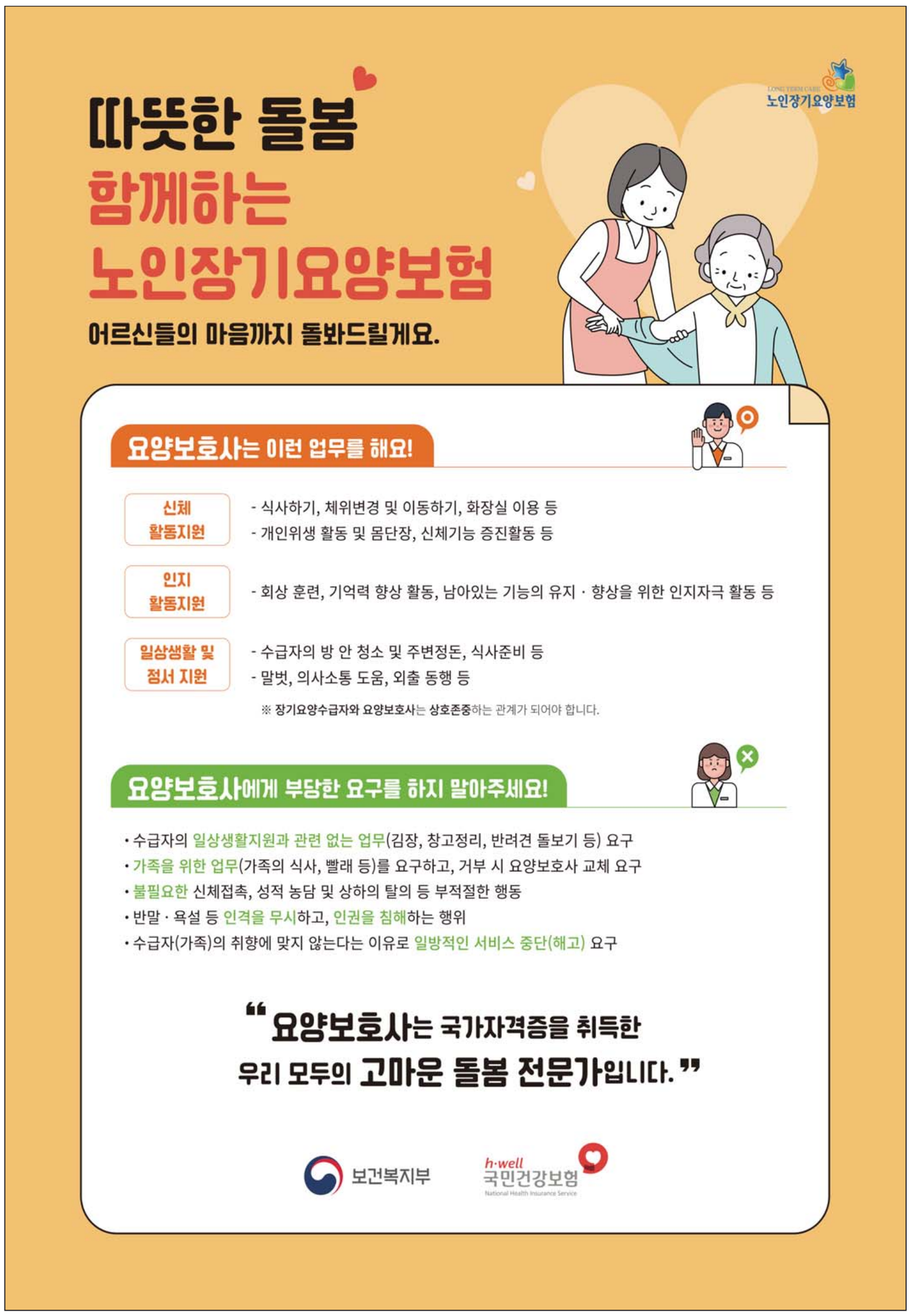
주종섭 “여수산단 위기 극복 실효적 대책 절실”

정부·지자체 전폭적 투자 촉구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5일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정 만으로는 여수산단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대책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고용 안정 대책에 머무르고 있어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 지속성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금융 지원과 직업훈련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고용위기 지원에서 여수산단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효과가 지역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정부는 국가 전략으로서 여수산단의 미래 산업 구조를 설계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함께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앞장서 여수산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적극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